

경제 위기 이후 지구화 과정과 문화 영역의 변화 추이: 시민권, 다문화주의, 민주주의, 종교

박성우
중앙대학교

2011년 3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1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경제 위기 이후 지구화 과정과 문화 영역의 변화 추이 : 시민권, 다문화주의, 민주주의, 종교

박성우
중앙대학교

I. 서론

1. 문제제기

오늘날 우리는 사상 유례 없는 상호 연결망의 범세계적인 확대, 심화, 가속화를 경험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 인구의 이동은 말할 것도 없고, 정보,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세계가 촘촘히 연결되는 지구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연결망은 정치, 군사, 경제, 정보, 기술,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총망라한다. 이 중 문화 영역은 지구화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 지구화로 인한 문화 영역의 가장 큰 영향은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문화적 차이는 종종 국민 국가적 정체성과 그 속성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한 국가 내에서도 젠더, 종교, 정치적 정체성, 소수자 집단, 토착인 등 다양한 차원에서 문화적 차이가 나타난다. 물론 지구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도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는 존재했으나 지구화는 과거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문화적 차이가 새롭게 드러내거나, 새로운 문화 차이의 요소들을 가미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구화 과정 속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두 가지 경향을 동시에 드러낸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확산, 인구의 잦은 이동 등으로 문화는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전파되어 공간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는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거에 국지적으로 머물러 갈등을 야기하지 않았던 문화적 차이가 이제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빠른 속도로 전파됨으로써 문화적 차이와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구화는 분명 전 세계의 시공간을 압축시켰고, 이로 인해 우리는 문화적 동질화와 이질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지구화로 인해 문화적 차이의 양면적 경향이 동시에 드러난다는 인식은 소위 문화에 대한 근대적 접근방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근대적 문화 개념에 따르면, 지배적인 문화가 일률적으로 ‘표준화’되고, ‘합리화’되며 다른 문화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피한 발전 방향이라고 보았다. 반면, 지구화 과정의 문화 개념에 따르면, 특정 지배 문화가 일방적으로 표준화되고 합리화되기보다는 기존의 문화가 끊임없이 교체되고, 새로운 문화로 대체되는 방식으로 문화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¹ 지구화로 인해 문화적 차이가 표출되는 방식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제 전통적인 근대적 접근방식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근대적 접근방식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은 문화를 보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



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문화적 차이나 전파 그리고 전반적인 문화 현상을 지구화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세 가지 시각

지구화 과정 속에서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문화적 충돌과 갈등을 중심으로 한 시각, 둘째, 문화적 동질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 시각, 셋째, 문화적 혼성화(hybridization) 경향을 중심으로 한 시각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시각들은 모두 지구화 과정을 전제로 비교적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문화 현상을 염두에 둔 시각이지만, 그 기본적인 가정은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이론적, 철학적인 사조(思潮)를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문화를 불가피한 충돌과 갈등의 과정으로 보는 첫 번째 시각은 문화의 개별적인 주체성(individual subjectivity)에 역점을 두고 있는 낭만주의적 근대성 개념에 의존하고 있으며, 문화를 동질화 과정으로 파악하는 두 번째 시각은 기본적으로 인간 이성이 한 방향으로 수렴될 수 있다는 보편주의(universalism)적 세계관과 계몽주의(Enlightenment)에 의해 뒷받침된다. 마지막으로 문화를 혼성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근대적 사조로 한정할 수 없는 소위 탈근대적 사고를 지향하고 있다. 이제 이같이 이론적으로는 근대적/탈근대적 사고에 바탕을 둔 세 시각이 각각 지구화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문화를 충돌과 갈등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문명충돌은 이제 비교적 널리 알려진 테제이다. 9·11 테러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경제위기가 있기 훨씬 전 헌팅턴은 1993 년 이미 앞으로 다가올 세계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문명의 충돌이 될 것이며, 이는 국제정치에서 점차 서구 중심적 국면에서 벗어나 서구와 비서구간의 문명충돌, 그리고 비서구 간의 문명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Huntington 1993). 그의 논증은 이슬람 세력에 집중되어 있다. 오랜 세월을 걸쳐 전개되어 온 이슬람과 서구의 군사적 긴장이 아직도 늦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특히 흥미로운 것은 ‘유교권과 이슬람권의 군사적 연계’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점이다. 즉 동아시아와 중동간의 무기의 흐름을 통해 두 세력이 연계하고 있으므로 서구권은 보다 단합해서 이를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구는 유럽과 북아메리카뿐 아니라 동유럽과 라틴아메리카까지 포함하여 단합해야 하고, 러시아와 일본은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유교권과 이슬람 국가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서구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명충돌론은 저자의 명성과 주장의 생소함으로 인해 한 동안 학계에서 논란거리가 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주장이 현실에서 설명력과 예측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이제는 거의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 헌팅턴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생각은 없다.² 다만, 그의 주장은 문화를 보는 하나의 시각으로서 자리 매김 될 수 있고, 이런 시각은 지구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헌팅턴의 테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를 갈등의 새로운 경계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 자민족과 타민족을 구분하는 특성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화는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으로 파악된다. 즉 문화는 인간의 다양성을 구분하는 집단적인 결정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이중 언어’, ‘이중 문화’, ‘다문화적 관례’ 등은 문화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국민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초국가적 문화 교류, 다국적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 이주나 교역을 통해 생기게 되는 문화적 전파 등은 이 시각에서는 문화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문명충돌론이 상정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시각은 한 공간 안에 문화적 차이가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시각에 따르면, 문화는 집단을 구분하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단위체이고, 국제정치이론에서 흔히 비유되는 ‘당구공 모델’로 정의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화 개념은 인류학적 접근에서 수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인류학적으로 문화는 학습되고 공유되는 행위 패턴이나 신념체계이다. ‘학습’이란 일순간에 충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 또 사회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공유’가 특정한 공간과 역사에만 한정될 수 없다. 사회성의 경계를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를 ‘학습’과 ‘공유’를 통한 행위와 신념으로 이해할 때 문화는 특정 영토와 특정 역사의 한계를 초월하며, 늘 개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헌팅턴에 의해 대표되는 문명 충돌론 그리고 문화적 갈등의 불가피성은 애초부터 성립하기 어려운 전제를 깔고 있다. 헌팅턴 자신도 이미 민주화라는 제 3의 물결을 제시한 바 있다. 적어도 민주적 담론의 차원에서는 문화적 이질성이 후퇴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두 번째로,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로 종종 명명되는 ‘문화적 동질화’ 테제는 비교적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구화, 특히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으로 인해 사회가 동질화를 겪고 있다는 관찰에 의존하고 있다. 맥도날드화란 사회학자 리처(George Ritzer)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식당의 원칙들이 점차 미국 사회의 부분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사회 부문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Ritzer 1993, 19). 맥도날드 원칙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버(Max Weber)의 용어를 빌자면, 맥도날드가 제공하는 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 등의 원칙들이 형식적 합리성을 띠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 세계의 합리화 과정을 주도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합리화 과정은 자본주의화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매개체는 역시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구화 과정에서의 자본주의화는 곧 미국화(Americanization)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미국화는 문화적 차원에서는 세계적인 문화 미디어의 영향력이나 소비자주의의 보편성으로 말미암아 문화적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³ 이렇게 지구화로 인한 문화적 동질화가 제국주의적 속성을 내비칠 수 있다는 해석은 맑스식의 자본주의화 해석과 많은 공유점을 갖는다. 문화의 동질화를 맑스 식으로 자본주의화와 문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게 되면, 문화적 동질화는 많은 저항과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Alfino, et al. 1998 ; Smart 1999).

그러나 문화적 동질화와 이에 따른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학자들은 경제적 차원의 지구화가 곧바로 문화적 동질화를 낳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문화적 혼성화 경향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러시아에서의 맥도날드화는 신속성, 효율성, 예측가능성이라는 형식적 합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러시아에 맞는 소위 ‘지방화’(localization)를 거치면서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킨다는 것이다(Talbott 1995). 러시아에서 맥도날드화는 짧은 시간에 식사를 마칠 수 있다는 합리성이나, 싼 가격의 합리성, 그리고 일률적인 메뉴선택이라는 예측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지구적 지방화’(global localization) 혹은 ‘지구지방화’(지방지구화, glocalization)으로 명명하며(Ohmae 1992), 경제적 차원의 지구화, 즉 자본주의화가 문화적 차원에서 곧바로 문화적 동질화를 낳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문화의 탄생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문화적 차원에서 지구화는 한편으로는 동질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화는 결국 문화의 혼성화(hybridization)와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이다(Comaroff and Comaroff 2001; Jameson and Miyoshi 1998; Appadurai 2001).

세 번째 접근 방식으로서 문화적 혼성화(hybridization)는 기본적으로 순혈주의의 터부를 깨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국민 국가적 정체성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경계의 애매함이나 경계의 투과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혼성화 테제는 사실 지구화의 진행과 함께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흔히 전통과 근대화의 공존이 가능하고, 도시화된 문화와 전통적 가치의 공존을 의미한다. 지구화 시대의 전후를 막론하고 문화의 혼합은 늘 진행되어 왔다. 다만, 문화적 결합을 문화적 동질화나 문화적 갈등론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적 혼성화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지구적 지방화(global localization)와 지방적 지구화(local globalization)로 표현될 수 있다.

문화적 혼성화 테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문화적 혼합이 단순히 표면적인 수준에서 이뤄지지 문화의 본질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음식, 옷, 패션, 소비행태, 오락, 예능 등은 문화적 혼성화가 이뤄지지만, 보다 근본적인 태도나, 가치, 문화의 구조적 구성 원칙 등은 여전히 혼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세계는 외견상 지구화 경향이 나타나지만, 이는 단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보다 깊은 차원에서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언어가 유입될지언정, 문법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문화적 혼합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문화적 접촉과 이에 따른 영향력도 평가절하 해야 한다. 제트비행기부터, 전자미디어 혁명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발전이 문화의 틀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부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구화는 정보화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즉 이런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의 유입이 아니라 분명 문법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화적 혼성화의 가능성 여부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적으로 피상적인 것과 심층적인 것의 구분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특히 대중문화의 경우는 피상과 심층의 구분이 애매하다. 또 문화의 피상적인 혼합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심층적인 구조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피상과 심층의 구분만으로 문화적 혼성화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3 미래 예측과 문화적 쟁점들

지구화 과정을 통해 문화적 전파의 속도가 빨라지고, 양과 폭, 깊이 면에서 문화적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세계의 문화적 지형이 어떤 모습을 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 앞서 살펴본 세 시각은 지구화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각각 다른 예측을 내놓을 것이다.⁴ 일반적으로 문화적 갈등과 이질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지구화는 단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지구화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는 지역화, 지역 블록의 형성, 나아가 문명의 충돌로 이해될 것이다. 반면, 문화적 동질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지구화는 전반적으로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근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실령 제국적 속성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서구화와 미국화를 피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혼성적 시각에 따르면, 지구화 과정의 결과는 항상 열려있고, 현재의 지구화는 단순히 지배적인 문화의 전파가 아니라 지구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과정으로 파악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들이 내놓은 상이한 전망을 평가하고, 지구화에 따른 세계 문화 질서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문화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무엇이 문화를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인가를 정하는 것조차 여전히 논쟁적이다. 문화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엄밀하게 정의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문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논문은 문화를 한 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이들의 생활양식을 지배하는 광범위한 이념이자 행위패턴으로 이해한다. 논문은 이러한 광범위한 이념과 행위패턴 중에서 특히 최근 두드러지게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네 가지 문화적 쟁점에 주목할 것이다.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네 가지 쟁점은 시민권, 다문화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종교다. 이것들이 세계 문화의 모든 쟁점들을 포괄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논문은 이 네 가



지 쟁점들이 지구화라는 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문화적 쟁점들이며, 현재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파악한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이 네 가지 문화적 쟁점들이 지구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어왔고, 또 이것이 세계 문화 전체에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II. 국민국가 정체성의 도전과 새로운 시민권론

1. 지구화와 시민권 담론의 변화

시민권이란 특정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그 국가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시민권을 권리에 대한 권리로 이해하는 경우 시민권 문제는 의당 법률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국가도 시민권 문제를 단순히 시민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적인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시민권 문제는 곧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 누구에게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포용과 배제의 문제이며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이 경계의 설정은 단순히 실정법적 규정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포용과 배제를 결정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소속된 구성원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나는 이 공동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등을 되물으며, 끊임 없이 구성원과 공동체 간의 피드백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민권 담론은 공동체 구성원이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과거 시민권론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서 비교적 동질적인 구성원들에 대해 어떤 종류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1949년 마샬(T.H. Marshall)은 그의 저서 《시민권과 사회계층》(Citizenship and Social Class)에서 영국의 시민권이 이제 시민적 권리(civil right: 어떤 권위에 종속된 신민(subject)으로서가 아니라 사적 관계에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와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를 넘어 사회적 권리(social right, 공적 교육, 건강보험, 실업보험, 노년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때만 하더라도 시민권 논의의 쟁점은 기껏해야 국내 구성원들, 즉 이미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 들어 온,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영국에서 여성, 노동자, 유색인 등이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들은 영국 일반 남성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지구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시민권 논의는 보다 복잡해졌다. 노동과 자본의 이동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현대 국가의 경우 과거와 같은 배타적인 시민권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기왕에 경계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이질적인 집단이 장기적으로 경계 안에 들어와 거주하게 되면서 사실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버렸다. 이제 공동체 안에는 시민과 비시민의 갈등이 사회적 불안의 한 요소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지구화의 진행 속도와 맞물려 특정 국가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들이 안고 있는 정체성의 불안정은 그들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이질적인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



체는 어떤 근거에서 이들에게 기존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지 이들과 시민들에게 공히 해명해야 한다. 이는 기왕의 시민들에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되고, 결국 공동체와 구성원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아감벤의 표현에 의하면, ‘별거벗은 생명’에 해당하는 이들 비시민들을 어떻게 다루고 이들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들에게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제 비시민을 포함하는 시민권론을 어떻게 전개하고, 아울러 지구화 과정 속에서 문화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존의 시민권 논의(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맥락에서의 시민권론)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화의 변수가 기존 논의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지구화 과정을 통해 불거진 시민권 논의의 새로운 단계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독일의 시민권론을 검토하면서, 문화담론으로서의 시민권론의 미래를 진단하고자 한다.

2. 자유주의적 시민적 덕의 가능성: 시민적 공손함(civility)의 발휘

시민권은 한편으로는 개인적 권리와 자격(entitlements)이라는 자유주의적 개념들과 연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공동체의 성원권과 소속이라는 공동체주의적 개념들과 연결된다. 따라서 시민권론은 종종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을 중재할 수 있는 개념을 제공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시민권론에 따르면, 권리에 대해서 수동적이며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시민적 의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법을 위반하지 않고, 타인에 해를 가하지 않으며,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의무와 같은 것들이 자유주의적 시민권론이 제시하는 시민적 의무들이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자유주의적 시민권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 중 하나를 간과한 것이다. 그것은 시민적 공손함(civility) 혹은 정중함(decency)이라는 것인데, 이는 암묵적으로 자유주의적 시민권을 누리는 시민들 사이에 요구되고 있는 시민적 덕성이다.

이와 같은 시민적 공손함은 정치적 영역에서뿐 아니라 실제로는 주로 거리에서, 동네 가게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제도들과 포럼들과 같은 일상생활의 행위에서 적용되는 덕성이다. 시민적 공손함은 국가가 법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차별적 요소의 배제를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인종이나 성별 등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정부의 법률과 정책은 기회의 평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신념의 침해라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개인들이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갖는지의 여부는 이러한 정부의 행위뿐 아니라 시민사회 내의 여러 제도들의 행위(회사, 학교, 조합, 상점, 지주 등)에도 의존하고 있다.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가게 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들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다면, 비록 국가 자체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평등한 시민권을 거부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가 이제 가장 평범한 개인들의 일상의 결정에 적용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평등한 대우는 시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시민적 덕성의 하나인 시민적 공손함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과거 공동체주의자들은 시민적 덕성을 훨씬 고차원적인 목적론과 명분에서 찾았다. 소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적 공화주의로 명명될 수 있는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의 입장은 시민적 덕성을 갖춘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한다. 이들은 정치적 삶의 내재적 가치를 참여 그 자체에서 강조한다. 이들의 관점에서 정치적 삶은 가정이나, 이웃, 직업에서의 사적인 즐거움보다 우월하며, 정치적 삶의 실패는 곧 인간으로서의 본질적 요소의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적 덕성은 의무나 부담이라기보



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들의 관점이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 공화주의가 직면한 문제는 실천적 이행의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유주의적 개별적 시민성에 머물러 있다. 공화주의적 덕을 온전히 발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정치체가 출현하는 일은 요원할지 모른다. 자유주의적 시민성 이상의 시민적 덕의 함양은 포기해야 하는가? 앞서 언급한 시민적 공손함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현대 민주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소극적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시민성에서 출발하면서도, 국가가 보장할 수 없고 개별시민이 책임져야 하는 시민적 덕이 가능함을 보이는 예이다. 특히 지구화 시대 노동의 이동으로 인한 이방인과의 공존은 동질적인 구성원을 전제로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공화주의의 전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제 시민적 덕성은 공화주의 전통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유주의적 시민성에 기반한 시민적 덕은 공화주의적 이상과 비교할 때 그 깊이가 낮을 수 있으나 현대적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

3. 배제적 시민권에서 포용적 시민권으로: 독일의 민주적 반추(reiteration)의 사례

철학적 관점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주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내재적인 문제이다. 즉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 인권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로운 결합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자유주의가 공동체의 민주적 결정에 의해 확보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기본권이란 공동체에 속하기 이전부터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가진 권리이다. 따라서 민주적 결정에 의해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비시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기왕의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근거와 모순된다. 만약 비시민들의 인권을 무시한다면, 언제 시민들의 기본권도 민주적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위협받을지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단순히 민주적 자결권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닌 한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비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1990년 10월 31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쉘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 의회가 1989년 2월 21일 통과시킨, 기초단체(Bezirk)와 구역(Kreis)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변경시킨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1985년 5월 31일 이후 시행되고 있던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선거법에 따르면, 기본법 제 116조 규정에 따라 독일인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들은 18세에 이르면, 해당 선거구역에 최소 3개월 이상 살았을 경우, 선거권을 갖는다. 1989년 2월 21일 제정된 법은 이 내용을 수정했다. 즉, 쉘레스비히-홀슈타인에 최소 5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법한 거류증을 소지하거나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거류 외국인들, 그리고 덴마크나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시민들은 지방선거와 구역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들 6개 국가들은 마찬가지로 거류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으므로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의원들은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들 국가의 시민들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의회는 이 법이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논지로 판결하였다.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선거법의 개정내용은 독일 기본법 제 20조와 28조에 명문화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이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국가의 입법과 국가 구성을 할 수 있는 주체인 국민은 오직 독일 국민이며, 외국인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 국민만이 스스로의 결정의 결과를 책임지게 된다, 반면 외국인들은, 영토 내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했는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논지를 폈다. 즉 국민주권의 개념에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은 국가권력 안의 모든 수준 즉, 연방, 주, 구역, 지방 등에 걸쳐 모든 수준에서 투표



권에 대한 주요 지침이 일치될 필요가 있다는 논지이다. 서로 다른 국민주권 개념이 국가의 서로 다른 수준에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기 거류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주와 연방과는 다른 차원의 국민주권이 구역과 지방에 허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판결이다.

이 판결의 쟁점은 누가 국민을 구성할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시민권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의 의미에 관해서는 단일하고 통일된 개념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그 대표 기구를 통해 시민권의 개념을 바꿀 수 있음도 허용함으로써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후 10 년간 독일 사회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시민권을 정의하는 일을 인구 구성에 따른 민주적 입법부의 몫으로 돌림으로써 이와 관련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보다 명료하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 사회의 분위기는 점차 현재로선 독일 시민권이 없지만 독일에 거주하는 내국인(Inlander)을 인정하는 쪽으로 전환되었고, 이민 2 세, 3 세의 자녀들에 대한 귀화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쪽으로 귀결되었다. 결국 2000 년 1 월 새로운 독일 시민권법이 통과되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쉘레스비히-홀스타인 주와 함부르크(Hamburg) 시의 선거법 개정안을 거류 외국인이 시민이 아니므로 선거자격이 없다고 철회시킨지 10 년 만에 독일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왕의 배타적인 시민권이 붕괴된 것이다. 유럽연합 국가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지방 차원뿐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 차원의 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나아가 독일은 이제 이민자의 나라임을 인정하고, 이민 후세들을 속지주의에 따라 독일 시민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Benhabib 2004).

4. 새로운 시민권론에 대한 전망 및 소결

추산에 따르면, 1910 년에 약 2,200 만 명 정도가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이주민으로 살았던 반면, 2000 년에는 약 1 억 7,500 만 명에 이른다. 1910 년에서 2000 년 사이 세계 인구는 16 억에서 52 억으로 약 3 배 정도 늘어난 반면, 이주민은 같은 기간 동안 약 6 배가 증가했다. 특히 20 세기의 마지막 35 년 동안 약 7,500 만 명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정착했다(Benhabib 2004).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전 세계 인구 중 이주민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이주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난민의 숫자도 증가했으며 이들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지는 경향도 있다.

III. 지구화와 다문화주의의 미래

1. 이론적 배경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의 경우 자신과 다른 정체성의 문화를 집단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자각은 일찍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국가 내에서 주로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는 일부 다민족 다문화 국가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지구화 과정에 따른 자본과 노동의 이동은 그 속도와 폭, 깊이, 모



든 면에서 강화되었고, 이제 어느 국가도 동질적인 문화만을 고수하는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처럼 비교적 전통적인 문화를 가졌던 국민국가들이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낯선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 등으로 다문화 사회의 문제들을 자각한지는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우리나라 역시 약 42 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으며, 이들의 불법체류관리와 인권보장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 농촌총각의 사분의 일 이상이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2 세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가 직면하게 될 여러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와 해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치이론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비는 소위 재분배의 정치(politics of redistribution)에서 인정의 정치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재분배의 정치는 정치의 목적을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내재한 사회경제적 부정의를 제거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 소득의 재분배를 포함하여 노동 분업의 재편성, 투자결정의 규제 등으로 경제적 구조를 재조정한다. 재분배의 정치에서 공공정책의 대상은 시장이나 생산수단과의 특수한 관계에 의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급 혹은 이와 유사한 집단들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에게 보다 공평한 기회와 경제적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인정의 정치는 개인의 존엄성이 경제적 평등보다 개인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정의 정치는 한 공동체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적 표현이나 해석, 의사소통의 방식 등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문화적 지배나 집단적 경멸을 표출한다면 이를 제거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천하게 여겨진 집단의 손상된 정체성과 문화적 산물들을 정상적으로 재평가하고 인정해야 하며,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생산하는 사회적 해석이나 소통 등 상징체계의 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

다문화주의란 이와 같이 인정의 정치의 관점에서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인정의 정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 다문화주의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적 가치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집단적 문화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를 유린하는 경우 다문화주의는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경우 국가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인권 보호를 우선시 해야 하는가? 예컨대, 여성할례를 강요하는 소수집단이 있다고 하자.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해 주기 위해 이와 같은 비인륜적 관행을 허용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가장 간단한 해답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반인륜적인 관행은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로 인정될 수 없다는 규범을 세우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규범을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보편성에 대한 주장 자체가 서구 근대가 설정한 편견이라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권이 침해 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당사자가 보편적 인권에 의해 보호받는 것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관습에 따르기를 더 원할 경우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할례의 고통보다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수치와 사회적 편견을 더욱 괴로워한다면 말이다. 어느 소수집단이든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문화적 일탈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보다 좀 더 심각한 그래서 보다 결정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보자. 만약 어느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의 공립학교 교육을 거부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 나라는 일정한 나이까지는 시민들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자. 어린 아이들의 의무교육을 거부한 소수 집단의 부모를 처벌할 것인가? 만약 소수집단에 소속된 부모가 아닌 경우 자식의 의무교육을 거부했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부모는 더 이상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소수집단의 부모는 다문화주의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은 이질적인 문화정체성을 가진 소수집단을 어떤 틀에서 주류사회가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들에 접근하는 방식은 단지 인류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소수집단의 시민들 혹은 비



시민들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느냐는 결국 주류 집단의 정체성을 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주류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떤 가치를 이질적인 것임에도 받아들이고, 어떤 가치는 용납할 수 없는지를 정하는 문제는 곧바로 이들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는 사실 애매한 개념이고,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들이 다문화주의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가 정부의 정책이나, 혹은 사회운동이나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혹은 어떤 정치철학적 관점에 있느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⁵ 앞에서 인정의 정치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접근했던 것은 다문화주의가 정책이나 운동의 차원 이상의 정치철학적 원칙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다문화주의로는 앞서 든 예와 같은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보다 실천적 차원에서 다문화주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문제의 주체는 누구이고,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주체로서 주류집단과, 소수집단, 그리고 주류집단 혹은 소수집단에 속한 개인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목적으로는 문화적 동화 혹은 독자성의 유지가 있을 것이다.

즉, 오늘날 가속화되는 지구화 과정 속에서 국민국가의 경계 안팎에는 새로 이주한 소수집단과 기존의 시민들, 그리고 새로 이주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비로소 자신들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과 사회적 다수 집단이 존재한다. 이 두 집단은 사실 상충하는 두 개의 목적을 지향할 수 있다. 기존 시민들 그리고 다수자 집단의 경우, 이질적인 소수집단이 가져올 일상생활의 충격이나, 경제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의 심화, 그리고 기존 전통 문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다. 이런 우려는 극단적으로는 이들 소수집단의 배제와 추방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들의 문화가 기존의 다수집단의 문화에 동화할 것을 요구한다. 즉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사회의 규칙과 관습, 생활양식 등을 존중하고 적응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화정책을 국민국가 내 소수집단의 개인들을 차별 없이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다문화주의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집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배제와 추방보다 낫지만, 이것이 인정의 정치에 기반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이질적인 문화의 유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배적인 다수 집단이 이들 소수집단의 이질적인 문화 요소를 인정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 이들 소수집단이 새로운 이주처에서 이들의 집단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다문화주의는 그 당사자들에게 이에 대해 답을 마련해 줘야 한다.

다문화주의가 제공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는 새로운 이주자들이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이들은 거처를 옮겨 자발적으로 새로운 장소에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이므로 인종과 문화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한 개인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할 것이다. 기존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이들이 가진 능력에 따라 이들을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다문화주의적 가치가 필요하다면, 이들이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의 사용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일이다. 즉 이들이 주류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앞에서 소수집단을 동화시키는 정책을 다문화주의의 한 줄기로 간주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2. 프랑스의 스카프 사건과 다문화주의의 전망

소위 ‘스카프 사건’의 발단은 1989 년 10 월 19 일 크레일(Creil) 지방에 있는 가브리엘 하베즈(Gabriel-Havez) 중학교의 교장 세니에르(Ernest Chénier)가 세 명의 여학생(Leila Achahboun, Fatima Achahboun, Samira Saïdani)에게 두건을 쓴 채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한 데서 발단했다. 교장과 부모가



두건을 씌우지 않고 학교에 보내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학생들은 다음 날 아침 두건을 쓴 채 학교에 등교했다. 그 배경에는 〈프랑스 이슬람 국민연합 전 회장단 모임〉의 수석 위원이었던 레클릭(Daniel Youssouf Leclerc)의 조언이 있었다. 세 학생은 프랑스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행사하고자 했으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라는 기왕의 경계에 도전을 제기한 것이며, 이로써 프랑스는 정교분리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정교 분리의 애매함이 문제가 되었다. 일차적으로 정교분리는 국가가 분파적 종교 상징, 형상, 의복 소재 등을 공공 영역에서 확실히 배제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종교적 관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명백히 중립을 지킨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1989년 11월 4일 당시 프랑스 교육부장관이었던 조스핀(Lionel Jospin)은 이 문제를 최고재판소로 회부했고, 이 재판소는 프랑스가 헌법과 법률 및 국제 규범을 준수함을 부연하면서, 처음부터 두 원칙을 정의롭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천명했다. 2004년 2월 10일 프랑스 국회는 절대다수의 지지를 통해(찬성 494, 반대 36 기권 31)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상징이 될 수 있는 일체의 의상 착용을 금지했다. 비록 이 법은 어떤 형태든 모든 종교적 외형물(예컨대, 기독교의 십자가나 유대교의 모자, 이슬람 여학생의 두건)을 금한 것이지만, 주 대상은 이슬람교도들의 복장이었다.

정교분리와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이에 균형을 잡고자 한 이 재판은 종교적 상징이나 복장을 착용하는 것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학교 당국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문제를 존속시켰다. 그러나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과 공공 영역에서 어떤 종교적 상징 행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균형은 정교분리의 사안을 넘어 프랑스 공화주의에 규범적 토대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프랑스에서 사회적 평등과 성적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주의 대 공화주의, 다문화주의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이르렀다. 스카프 사건은 결국, 지구화와 다문화주의 시대를 맞은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으로 통합되는 과정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 땅에 사는 이슬람 국가들의 이민 2세와 3세가 사는 현상으로부터 초래되는 다문화주의적 압력을 어떻게 정교분리와 공화주의적 평등 및 민주적 시민권이라는 프랑스적 관행과 전통 안에서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된 것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듯이, 이와 관련된 정책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은 시민권과 연계되어 있다. 국내에 새롭게 형성된 비 시민 혹은 기존의 소수집단 혹은 소수자들에게 집단으로서 어떤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인종, 다문화국가의 성격을 가진 국가들에게 이와 같은 소수집단의 집단적 권리의 허용 여부, 특히 이들의 문화적 권리를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지구화 과정과 유럽 통합 등은 점차 많은 국가들이 이와 같은 다인종, 다문화적 배경을 갖게 하였고, 이를 둘러싼 문화적 갈등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이 다문화주의적 쟁점들에 비교적 둔감할지 모르지만, 현재 관찰되는 지구화의 속도는 조만간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IV. 지구화와 민주주의: 이념과 대응

1. 지구화와 민주적 정당성의 위기

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이동과 흐름이 빨라지고 다른 국가로의 이주나 인구의 이동이 빈번해지는 지구화 경향은 민주주의 이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란 공동체의 지배형식을 규정하는 제도이자,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규정하는 포괄적인 이념이다. 그러나 정치이론적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은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혹은 다수)인 ‘데모스’(demos)가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갖고 자가지배(self-governing)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모스가 이와 같은 주권적 권력을 가져야 하는 근거는 데모스를 구성하는 개별 인간들이 국가성립 이전부터 인간으로서 향유할 기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은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인권을 갖고 있고, 국가는 이 인권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의 원칙은 보편적 인권 원칙의 고수와 주권의 자기결정권 사이에 소위 ‘구성적 딜레마’를 갖고 있다 (Benhabib 2004, 2).

이런 민주주의의 구성적 딜레마는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이 잦아지고 인구의 유입이 많아지는 지구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예컨대, 국경을 통제하고 입국자의 성향과 숫자를 모니터 하고자 하는 국가의 주권적 요구와 인권선언의 내용은 모순을 빚게 마련이다. 일찍이 칸트는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세계시민주의적 연방제(cosmopolitan federalism)라는 방식으로 풀려고 시도한 바 있다. 즉 공동체의 경계 안에서 구성원들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다른 한편으로 현존하는 국민국가의 고유성만을 고집하지 않는 민주적 결속(democratic attachments)의 필요성을 동시에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지구화 과정을 통한 인구의 이동과 구성원의 성원권(membership)을 정하는 문제는 칸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띤다.

지구화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 지구화 특히 자본과 노동시장의 지구화는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새로운 행위자를 권력의 주체로 허용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개별국가 안에서 이미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국가의 주권 행사는 제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국민국가는 민주적 제도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전제로 구성원들에게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글로벌 권력은 이와 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이미 개인들을 현실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자본 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타국이나 국제기구 등 초국가적 기구들의 영향력이 특정국가의 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지구화로 인한 민주적 정당성의 두 번째 위기는 국민국가 구성원의 정체성을 잠식한다는 데 있다. 노동과 자본의 급속한 흐름은 곧 문화의 유입을 의미하고 이는 기왕의 동질적인 문화를 훼손할 가능성을 높인다.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문화적 동질성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이로 인해 민주적 정당성의 기초가 되는 구성원들 간의 민주적 동의의 유지를 어렵게 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예컨대, 특정 공동체가 기왕에 지향해 왔던 자유의 범위와 평등의 내용은 보편적 인권의 차원을 넘어 특정공동체의 문화적 요소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질적인 문화의 유입은 이와 같은 민주적 합의와 동의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와 같이 지구화에 따른 민주적 정당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단순한 반응으로 지구화 경향을 거부하고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글로벌 세력과 초국가적 기구들의 확장을 경계하며, 전통적인 국민국가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민국가적 요소가 약화되고, 초국가적 행위자의 영향력 증대



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제 국민국가는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모색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지구화에 따른 민주주의 이념의 문제는 타자의 권리 문제, 시민권 설정에 있어서 배제와 포용의 원리, 그리고 다문화주의의 규정 등 이미 앞서 다루었던 주제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실천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틀과 담론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 글로벌 데모스(demos)를 구성할 수 있는가?

세계화의 조건 하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모색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글로벌 데모스에 대한 호소를 들 수 있다. 단일 국민국가의 주권 행사의 정당성이 그 국가의 데모스(고대 그리스의 평민집단을 의미하나 근대적으로는 경계가 설정된 인민을 의미)의 존재로부터 나오듯, 전 지구적 차원의 거버넌스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데모스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벗어 버린, 세계시민만으로 세계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인구는 특정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시민들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세계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한 글로벌 수준에서 민주적 인류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갖는 글로벌 데모스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일부의 학자들은 견고한 글로벌 데모스를 구성하는 것을 포기한 대신 느슨한 형태의 글로벌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한다(John Keane, Andrew Kupur etc.). 즉 초국가적 행위자와 정치기구들에 있어서 전지구적 차원에서 반응성과 책임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데모스의 구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의 획득을 모색하는 것이다.

바텔슨(Jens Bartelson)은 전통적으로 근대 국민국가에도 사실상 엄격한 의미의 데모스가 구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역사 사회학적이고 해체주의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느슨한 의미의 글로벌 데모스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즉 근대국가 체제도 실재와 달리 국민국가적 데모스가 존재한다는 이론적 가정을 출발점으로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추구했던 것처럼,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현재로서는 견고한 수준의 글로벌 데모스의 출현 가능성을 기대할 순 없지만, 근대국가와 구분되는 새로운 정치 주체가 출현할 수 있으며, 이를 매개로 새로운 민주적 정당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Bartelson 2008). 이런 관점에서 기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민국가의 데모스는 다른 데모스와 완전히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서로 협력이 가능한 다중적 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특정 국가의 데모스를 애초부터 견고하고 정형화된 것으로 볼 필요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유동적이고 사안별로는 상대적인 데모스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보우만(J. Bohman)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일한 데모스가 아닌 중첩적이고 다원적인 복수의 데모스, 즉 데모이(demoi)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의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3. 데모스(demos)에서 데모이(demoi)로

전통적으로 근대 사회계약이론은 데모스의 단일성이 전제되어 있다. 루소가 제안한 바 있듯이 인민의 일반의지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집단의 동질성을 요구한다. 즉 온전한 의미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 법률이 그 공동체를 규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지배(혹은 자기 입법)의 원칙에 따른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지



배의 주체이자 동시에 지배의 대상이 될 것을 요구한다. 근대 초기 이런 원리의 작동은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호소에 힘입은 바 크다. 특정한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재산의 과다나 신분의 차이를 불문하고, 지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즉 지배의 주체와 대상이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들이 다른 아닌 보편적인 인권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고에 기초해 있다. 문제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는 다원적이고 탈중심적인 입법과정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국가 범위 밖에서 새로운 데모스의 구성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우만은 견고하고 단일한 데모스가 아닌 중첩적이고, 다원적인 데모이의 출현을 개념화하기 위해, 세계화의 결과로 민주주의의 규범이나 원칙에 근본적인 변형을 초래하였는가를 자문한다. 마치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을 변형시킨 것처럼(직접적인 자가지배에서 대표를 통한 지배도 자기입법이라는 근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했던 것) 세계화는 자가지배의 기본원리를 변형시키고 있는가? 보우만은 만약,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자가지배(혹은 자기입법)를 위해 특정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질적인 데모스 전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에는 변형이 없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런 맥락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글로벌 데모스, 혹은 글로벌 시민사회에 대한 호소는 단일한 데모스를 전제로 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기본원리를 고수한 채 단지 데모스의 크기만을 확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우만에게 글로벌 데모스에 대한 가능성 모색은 세계화에 따른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보우만은 세계화가 단일하고 견고한 데모스로부터 중첩적이고 다중적인 데모이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데모이가 변화된 현실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보우만은 (James Bohman)은 마치 한 공동체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으로서 구성원 개개인들이 심의(deliberation)와 쟁론(contestation)을 통해 공공선(public good)을 발견해 나가듯이 중첩적이고 다원적인 데모이도 사안 별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심의와 쟁론을 벌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공공선의 산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Bohman 2007).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은 국민국가가 전제하고 있는 단일한 데모스와 구별되는 새로운 데모스 영역의 설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데모스 크기의 단순한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우만에 따르면,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복수의 데모이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복수의 데모이가 기왕의 전통적인 데모스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왕왕 기왕의 견고한 데모스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층적인 데모이에 의한 새로운 규범의 모색이 국민국가적 데모스의 의지에 의해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뒤에 거론되겠지만, 예컨대, 독일의 한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의 인정이 독일연방 의회에 의해 위헌으로 제소된 것). 이와 같은 소위 ‘데모이 문제’를 보우만은 민주주의를 최소주의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해결하려 한다. 즉 최소한의 절차에 대한 존중과 비지배적 자유(공화주의적 자유)에 대한 존중으로, 다층적인 데모이의 존재를 기왕의 데모스의 폐쇄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 소개될 벤하비브의 민주적 되풀이는 데모이의 도전이 기왕의 데모스의 심의과정에 어떻게 편입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4. 민주적 반추(democratic iteration)

오늘날 세계시민주의적 규범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개별 정체체제의 정치문화와 법문화 속에 내재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민권의 변화는 양자 간의 다중적 관계를 드러내는 예가 된다. 아직까지 성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미등재 이주민, 난민 등이 여전히 특정 정치체제에서 범죄인으로 취급되는 것은



세계시민주의가 개별 공동체의 정치적 법적 문화에 제대로 내재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그리고 개별 정치공동체가 설립되기 이전의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전 세계인구의 이동을 범죄시해서는 안 되며, 개별 인간들의 정치적 시민권의 지위가 어떻게 간에 도덕적 인격을 갖는 존엄한 존재로 대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경을 건너 다른 정치체제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범죄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 표현이자 인류가 공유해야 할 세계에서 더 나은 삶을 찾는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편적 확대라는 세계시민적 규범에 부응하는 정책이나 법을 법제도와 담론적인 의지 및 여론 형성을 통해 만들어내야 주체는 바로 각 나라의 개별 데모스들이다. 따라서 민주적 데모스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입법의 과정으로 종결된다. 이 과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자들은 누가 배제되고 누가 포용되어야 함을 정하는 데 참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하비브(Seyla Benhabib)는 배제된 자들의 격론을 통해 기존의 데모스들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입법이 가능해지는 민주적 되풀이(democratic iteration)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기존의 데모스가 지금까지 배제되어 온 집단에 의해 기본 권리와 원칙들의 의미가 재설정될만한 정도로 지속적인 정치적 쟁론에 직면하게 되면, 기존의 데모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민주적 관행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벤하비브는 이와 같은 민주적 되풀이가 세계 시민주의적 국제법의 규범과 민주적 개별 법체계의 집행 사이에 다중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보았다.

벤하비브에 의해 제시되는 ‘민주적 되풀이’는 지구화 과정에서 불거지는 민주적 정당성의 추구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보편적 권리의 요구가 특정 공동체에 민주적 되풀이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양식은 공공적인 법제기구나 사법기구, 집행기구 차원에서 강하게 이뤄질 수도 있고, 비형식적인 차원에서 시민 사회적 친교와 언론 등의 약한 공공성 속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Benhabib 2007, ch.5). 결국 이방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타자를 특정 공동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 또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담론은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됨과 동시에 이들의 권리에 대한 담론의 형성과 변화는 데모스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5. 헌정적 애국주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원칙상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 혹은 심의 과정(넓은 의미의 지배과정)에 피지배자인 데모스의 직접적 (또는 적어도 간접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어떤 공동체가 민주적인 정치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치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과 심의과정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Cohen 1996; Benhabib 1996; Young 2000). 이런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포용적 지배 형태로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과 심의 과정에 그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테일러(C. Taylor)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귀속감과 연대감을 줄 수 있는 공통성(commonality)을 전제로 한다면, 이를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제는 불가피하다. 테일러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구성원들 간의 공동심의가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는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당한 수준의 응집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배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운영에 있어서 포용과 배제의 논리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즉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서 누구를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포함시키고, 누구를 배제할 것 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권리,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주지하다시피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체제는 노예와 여자, 거류 외국인 등을 배제하고 성인 남성들에게만 참정권을 줌으로써 배제와 포용의 기준을 삼은 바 있다. 그러나 포용과 배제의 기준은 역사상 끊임 없이 변화를 겪어 왔다. 근대 민주주의의 초기에는 사회경제적 신분, 재산, 인종, 성별에 따라 참정권의 범위가 정해진 바 있다. 그러나 19세기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19세기 중반 미국의 노예해방과 이에 뒤이은 1870년 15차 헌법개정, 그리고 1920년 19차 헌법 개정 등은 각각 흑인과 여성에게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써 포용과 배제의 범위를 변경하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배와 피지배의 일치를 요구하는 데모스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지구화는 외국인의 포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즉 국제적 인구 이동의 증가로 다수의 외국인이 경계 안에 거주하는 사례가 늘어나 다문화 사회가 보편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데모스의 범위를 기존의 시민으로 한정하고, 외국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모든 피지배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상적인 심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공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배제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공통성(commonality)이 무엇에 기반해야 한다고 보는지, 즉 어떤 공통성을 결여한 사람들을 ‘정당하게’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혹자는 공통의 언어를 요구하고 있으며(W. Kymlicka), 혹자는 공통의 문화(D. Miller)를 요구한다. 그러나 언어나 문화가 단시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들에게 언어나 문화의 공통성에 대한 요구는 이미 배타적인 특성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유에서 지구화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조응하는 새로운 공통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이나 ‘헌정애국주의’는 지구화에 따른 다문화사회에서 데모스의 새로운 공통성을 설정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규범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하버마스(J. Habermas)는 헌정애국주의가 민족주의적 특수성을 대체하는 보편적 공화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현재 전 지구적 인구이동의 증가로 각 국가마다 문화적 삶의 형태, 종족집단, 종교, 세계관 등에 있어 다양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족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사회통합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Habermas 1998a). 하버마스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 간 평화로운 공존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을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통합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Habermas 1998a). 이는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상호인정과 다원화된 사회를 하나로 묶어 주는 구속력을 동시에 요구하는데, 헌정애국주의가 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정애국주의는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 시민들 사이에 형성된 공통의 정치문화로서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특정한 정치적 공통성의 기초가 된다. 현재 헌정애국주의는 적어도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수준에서 그리고 지방선거와 같은 지방정치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헌정애국주의는 다문화 사회에서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성공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V. 세속화와 탈세속화: 종교적 신념의 지구화

1. 세속화 혹은 탈세속화 현황

오늘날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구화 과정 속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점증하는 추세다. 한편으로 포교와 세계적 전파라는 종교가 지닌 내재적 역동성은 지구화 경향에 힘입어 문화적 동질화를 가속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 종교적 가치에 기반한 문화적 보수주의는 지구화가 초래한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9·11 테러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과 연계되어 있음이 부각되면서 지구화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었다.

1950년대 서구 세계는 근대화와 함께 세속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종교의 쇠퇴가 지배적인 흐름이 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견은 적중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세계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근대적 의미의 세속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와 함께 오늘날 세계의 곳곳에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더욱 종교적으로 되어가는 탈세속화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일부 세계에서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근대적 의미의 정교분리를 부정하는 세력들로 존재하고 있다. 서구 세계에서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엄격한 분리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인 탈세속화 경향은 서구 국가의 문화와 공공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서구 세계에서는 공적영역, 특히 정치 영역에서 종교의 배제가 가능하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이제 생활 세계의 탈세속화 경향은 양자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고, 특히 종교적 신념을 다문화적 가치의 하나로 취급할 경우,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개입, 그리고 공공정책에 대해 소수집단이 갖고 있는 종교적 가치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기독교적 문화가 지배적인 지역에서 공립학교가 예배나 기도를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문제, 종교 집단이 특정 정파에 대한 선호를 표하는 문제, 프랑스의 ‘스카프 사건’, 영국의 루시디 사건 등, 이제 세계는 서구와 비서구를 막론하고 다시 탈세속화되어 가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문화 영역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제 지구화 과정이 이러한 탈세속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종교가 지구화 과정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종교와 지구화 과정의 전환의 상호구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 지구화와 종교가 현상적으로 얹혀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뿐 아니라 양자 관계에 대한 개념적이고 역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는 뒤로 미루고, 이 장에서는 우선 지구화 과정 이후 뚜렷이 나타나는 탈세속화의 각 지역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2. 탈세속화의 지역적 특성과 추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탈세속화가 지구화 과정이라는 조건 하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지역적인 구분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복음주의자, 남미 중심의 성령강림주의자, 그리고 유럽이슬람교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북미를 중심으로 한 미국 복음주의자(American Evangelicals)들은 20세기 후반 급증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미국 공화당 정치지형에 복음주의 교파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70-80년대 신보수주의와 연계하여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70년대 낙태가 합법화되자 이들 복음주의 교파는 가톨릭과 연합하여 본격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신보수주의자들과 결합한 이른바 ‘보수적 복음주의자’(Conservative Evangelicals)의 출현이다. 제리 팔웰



(Jerry Falwell),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 등 텔레비전 복음전도자(televangelist)는 대중운동을 전개 하면서 낙태, 동성애 반대 등 ‘보수적’ 가치를 수호한다. 이들은 문화적인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식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90 년대를 지나면서 복음주의 교파들은 분화되기 시작하는데, 일부는 빈곤, 환경 문제 등으로 사회적 아젠다를 확장시키는 ‘진보적 복음주의자’(Progressive Evangelicals) 그룹이 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복음주의자들이 여러 주요 사회적 쟁점들 가운데 낙태, 동성애 등 다루기 용이하고 선정적인 주제들에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9.11 이후 미국 주도의 전쟁에 반대하고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을 띠고, 문화적으로 자유주의적 경향을 통해 복음주의 우파와 대척점에 서 있다. 한편 미국의 복음주의 교파들은 전 세계에 담론과 실천, 공동체 설립 등 복음주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한다. 이들의 전파 내용이 미국 내 문화전쟁 이슈, 물질주의적 자본주의 등 근대 미국의 가치였는지 여부는 논쟁중이다.⁶

두 번째 탈세속화는 남미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성령강림주의자’(Pentacostals)의 확산이다. 이들은 오순절 계열의 교회 성장과 연계되어 있으며, 근대 합리주의로 이해할 수 없는 병 고침 등 초자연적 기사를 강조하며, 아울러 ‘부와 풍요’를 지향하는 번역의 신학이다. 이는 기왕에 남미 세계에서 성행했던 계급 분석을 통한 가톨릭 해방신학과 대조를 이룬다. 남미에서 해방신학은 탈냉전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으로 급격히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민중들은 계급성을 강조하는 가톨릭 해방신학보다 부와 건강을 강조하는 교파를 선호한 것이다. 혹자의 표현처럼, 해방신학은 빈자를 택했지만, 빈자들은 성령강림주의자를 택했는지 모른다. 한편, 오순절 교단의 급증은 남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불리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는 유럽적 이슬람(Euro-Islam)의 탈세속화 경향을 들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제 후퇴로 인해 유럽 내 무슬림 이민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종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여러 쟁점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지중해 아래 동남쪽 아브라함 종교의 본산지에서는 종교를 단순히 형이상학으로 한정시키는 계몽주의적 관념을 거부하고, 삶 전체의 국면을 포괄하면서 신정일치를 꿈꾸는 ‘신정적 최대주의자’(Theocratic Maximalist) 들을 볼 수 있다. 사실 유럽에서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각 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유럽 무슬림 이민자들의 유입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물론 유럽 문화에 적응하면서, 관용의 영역 아래에서 유럽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조화를 강조하는 이들도 있지만, 반문화적인 이슬람 공동체의 출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럽 각국에서는 무슬림의 움직임에 때로는 과민반응을 하기도 하는데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 프랑스의 스카프 논쟁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폭력과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종교집단의 탈세속화이다. 일부 폭력적인 극단주의 세력들은 자신들을 폭력의 전위대로 자임하면서 군사적 지하드를 선언하며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무슬림 국가 내부 후기식민주의 엘리트들까지도 ‘변절자’로 여기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알카에다 조직을 들 수 있다. 알카에다는 근대 국민국가 차원을 넘어, 국적이나 민족 정체성을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투쟁을 위해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소위 ‘폭력적 성전주의자’(Violent Jihadist)들이다. 종교와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폭력 간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남아시아에서 힌두적 정체성을 표방하는 공동체들 가운데 일부 ‘파시즘적 힌두주의자’(Fascist Hindutva) 들은 민족주의와 종교 근본주의, 핵무기 군비확장 등과 연계되어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힌두 근본주의 운동은 90 년대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이후 2000 년대 중반 이후 제도권 내부에서는 주춤거리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테러와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 아프리카 지형으로 이동하게 되면 제국주의자들이 남긴 야만적 체계로 조건화 지워진 후기 식민 상황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역사적 비극 그리고 자원을 둘러싼 이권 등과 함께 종교는 아프리카에서 ‘잔인한 서발턴’(cruel subaltern) 들이 출현하는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VI. 결론

이제 이상에서 검토한 문화적 쟁점들의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각 영역에서의 예측되는 미래 전망을 시도해 보자. 우선 시민권과 관련해서는,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최근 보편적 인권에 호소하는 세계시민주의가 이론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근대적 주권원칙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기존의 시민권론에 획기적인 변환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반된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기왕에 견고한 형태의 국민국가적 시민권이 새로운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비판 받으며 일부 해체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한 위기의식으로 국가주권의 원칙에 입각한 시민권 제도가 강화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국가의 하위 단위에서뿐 아니라 초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적 연대와 민주적 기구의 활동의 여지가 넓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현상들이 현존하는 근대국가적 시민권 제도를 완전히 대체했다기보다는 양자가 공존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고차원의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공동체 안에 이질적인 구성원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점차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시민적 덕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성 모델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소위 자유주의적 시민성을 기반으로 불간섭과 시민적 공손함을 결합한 시민적 덕의 형성이 가능하다. 이런 시민적 덕은 점차 이질적 구성원들과 공존해야 하는 새로운 현실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문화주의의 미래 역시 시민권론과 비슷한 전망을 내놓을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대 국가들이 국민국가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면 새로운 소수집단의 집단적 권리 역시 국민국가에 의해 부여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조건은 다문화주의 정책이 국민국가의 정체성이나 결속을 해치는 방향으로 제기되거나 주장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다문화주의의 미래는 소수집단에 대한 인정의 폭이 확대됨과 동시에, 그 인정이 정치공동체가 지향하는 전체적인 가치와 조화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현대국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 가치는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적 가치의 허용은 자유주의적 가치와제로심 관계에서 이루어 진다기 보다, 자유주의적 가치를 보완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소수집단의 권리가 자유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국가가 나타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범위 안에서 공동체의 결속과 유대를 강화하는 범위 안에서 소수집단의 권리는 존중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동화정책이나, 이질적 문화의 포용정책이 일방적으로 나타난다기보다 동화와 포용이 자유주의적 가치의 보강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지구화는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내재적 모순을 표면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구화는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에서 모두 데모스의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며, 데모스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의 수출이나 인도주의적 개입은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의 지속적인 과제였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수출이나 인도주의적 개입이 단순히 주도국이 원하는 정권의 창출을 위한 정책적 구실이 아니라, 이념적 정당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론적으로 데모스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주의를 수출하고, 타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국가의 범주를 초월하는 데모스 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데모스 경계의 재설정에는 국제적으로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다. 지구화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이미 다수의 비시민권자들이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들의 존재가 민주적 지배의 정당성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개입을 위해 경계를 초월한 데모스의 개념을 사용했다면, 이미 경계 안에 들어 온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구화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실천에 많은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자기지배라는 근원적인 정치적 가치를 유지하는 한 이



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배원리가 출현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우상의 시대는 지났다. 지구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이념 속에 녹아 있었던 가치들을 다시 불러 낼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다시 이 가치들을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조화롭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데모스의 경계 설정 문제는 바로 이런 과제를 풀어가는 전인차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와 관련해서, 지구화의 영향력과 미래를 전망해 보자. 20 세기 중반부터 종교는 사회과학 주요 분야에서 주변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근대화는 세속화 과정과 동일시되고, 종교는 시대착오적인 풍조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세속화론의 주창자들은 세계의 탈주술화를 예견한 것과 달리 21 세기의 현실은 전 세계적으로 탈세속화를 경험하고 있다. 20 세기의 세속화론의 결정적인 오류는 서구중심적이고 일률적인 근대화론에 가려 다양한 근대성들(multiple modernities)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근대성과 종교는 서유럽, 동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다른 경로로 관계를 맺었다. 근대성이 다양하다면, 세속화론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서유럽 안에서도 역사적, 제도적 경로 의존에 따라 세속화가 의미하는 바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⁷ 예컨대, 무슬림 이민자들의 유입에 대한 국가 정책 시행의 다원성은 뚜렷한 방식으로 드러나며, 이는 세계가 다른 종류의 세속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문화주의 논의를 전개하면서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종교 영역에서 보다 주목할 부분은 탈세속화가 지구화로 인해 보다 폭력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구화가 문화적 동질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탈세속화는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다른 문화적 쟁점들에 비해 종교의 영역이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검토한 바 있는 시민권론이나, 다문화주의 논의는 세계의 재종교화와 탈세속화가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어떻게 순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예이다. 반면, 탈세속화가 폭력화로 이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적 차원은 여전히 이론적 분석틀마저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주(註)

¹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오히려 근대성(modernity) 개념 자체에 수정을 초래하였다. 근대성이 고정된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문화가 합리화되고 계몽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다름이 공존될 수 있고,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개방성이 근대성의 표상이라는 것이다.

² 헌팅턴 주장에 대한 비판은 Rashid(1997), Camilleri and Muzaffar(1998)을 참고. 반면 헌팅턴 자신은 이 문명충돌론의 테제를 자신의 책에서 발전시켰고(Huntington 1996), 보다 광범위하게 문화의 차원에서 다루기도 했다(Harrison and Huntington 2000).

³ 문화적 제국주의에 비판은 미국의 미디어의 영향력이 전 세계의 문화를 동질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하는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Schiller 1989; Hamelink 1983).



- ⁴ 이런 관점에서 바버(Benjamin Barber)는 현 시점은 문화적 미래를 맥도날드화의 경향으로 보느냐, 혹은 문명의 충돌로 보느냐는 두 시각의 차이가 충돌하고 있다고 본다(Barber 1995).
- ⁵ 경제나 복지차원의 정책이슈로서 다문화주의가 논의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사회적 인정과 문화적 생존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문화주의를 접근한다. 경제와 복지 중심의 재분배로부터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다른 연구로 Fraser and Honneth(2003)을 참고. 재분배 문제를 중심으로 다문화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Barry(2001)가 있다. 국내연구로 설한(2005), 김남국(2005)이 있다.
- ⁶ 미국의 복음주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은 일방적이지 않다. 복음주의 교파를 수용한 타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자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서 미국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인 이민 2 세들이 복음주의 교파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미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다. 소수 인종 집단 가운데 한국인 복음주의 교인들이 미국에서 시민의식의 새로운 모델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Ecklund (2008)참고.
- ⁷ 최근 정치철학자 테일러(Charles Taylor)는 세속화를 세 차원(정교분리, 종교적 신앙심의 후퇴, 선택지로서의 종교)으로 분류하고, 서구 국가들의 세속화는 주로 세 번째 차원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Taylor 2007).



참고문헌

- 고상두, 하명신. 2010. "다문화 시대 독일의 시민권 변화." <국제정치논총> 50,1: 421-443.
- 곽준혁. 2003.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과 비지배 평화원칙." <아세아연구> 46,4: 311-58.
- _____. 2007.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보> 15,2: 23-42.
- 김남국. 2004. "영국과 프랑스에서 정치와 종교 - 루시디 사건과 헤드스카프 논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4,4: 341-362.
- _____. 2005. "경계와 시민: 국민국가의 국경통제는 정당인가." <한국과 국제정치> 21,2: 153-180.
- _____. 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4: 97-121.
- _____. 2005. "심의 다문화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한국정치학회보> 39, 1: 87-107.
- _____. 2010.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인권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국제정치논총> 50,1: 261-284.
- 김범수. 2008. "민주주의에 있어서 포용과 배제: 다문화사회에서 데모스의 범위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8,3.
- _____. 2009. "국민의 경계 설정: 전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3,1: 177-202.
- 김비환. 2007.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법철학연구> 10,2: 317-348.
- 설 한. 2010. "킴리카(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44,1: 59-84.
- 원준호. 2002. "헌법애국심과 독일 통일의 정체성 문제." <국제지역연구> 6,3: 189-211.
- 이동수. 2008. "지구화 시대 시민과 시민권." <한국정치학회보> 42,2: 5-22.
- Alfino, et al. 1998. *McDonaldization Revisited: Critical Essays on Consumer Culture*. New York: Praeger.
- Allen Buchanan and Robert O Keohane. 2006. "The legitimacy of global governance institutions."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20,4: 405-437.
- Andrew Kuper. 2004. *Democracy beyond borders: justice and representation in global institu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rry Smart. 1999. *Resisting McDonaldization*. Sage Publications.
- Bartelson, Jens. 2008. "Globalizing the Democratic Community." *Ethics and Global Politics* 1,4: 159-74.
- Beiner, Roland, ed. 1995. *Theorizing Citizenship*. Albany, New York: SUNY Press.
- Benhabib, Seyla. 2007b. "Democratic Exclusions and Democratic Iterat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6, 4: 445-62.
- Benhabib, Seyla. 1996. "Toward a deliberative model of democratic legitimacy." In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ed. Seyla Benhabib, 67-94.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nhabib, Seyla. 2002. *The Claims of Culture: Equality and Diversity in the Global Er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nhabib, Seyla. 2004.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habib, Seyla. 2007a. *Another cosmopolita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8. *Another Cosmopolita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njamin Barber. 1995. *Jihad vs McWorld: How Globalism and Tribalism Are Reshaping the World*. Crown.
- Bernard Yack. 2001. "Popular sovereignty and nationalism." *Political Theory* 29, 4: 517-536
- Bohman, James. 2004. "Republican cosmopolitanism."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2, 3.
- Bohman, James. 2005a. "From Demos to Demo: Democracy across Borders." *Ratio Juris* 18, 3.
- Bohman, James. 2005b. "The Democratic Minimum: Is Democracy a Means to Global Justice?"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19: 101-18.
- Bohman, James. 2007. *Democracy across Borders: From Demos to Demo*. MIT Press.
- Bonnie Honig. 2007. "Between decision and deliberation: political paradox in democratic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 1-17.
- Brian Barry. 2001. *Culture and Equality: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 Brigg, Morgan and Muller, Kate. 2009. "Conceptualizing Culture in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30, 2: 121-140.
- Buchanan, Allan. 2004. *Justice, Legitimacy and Self-Determi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milleri and Muzaffar. 1998. *Globalization: The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of the Religious Traditions of Asia Pacific*. International Movement for a Just World.
- Chua, Amy. 2003. *World on Fire: How Exporting Free Market Democracy Breeds Ethnic Conflict and Global Instability*. New York: Doubleday.
- Cohen, Joshua. 1989. "Deliberative Democracy and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Good Polity*, ed. Hamlin, A. and Philip Pettit, 17-34. Oxford: Blackwell.
- Cohen, Joshua. 1996. "Procedure and Substance in Deliberative Democracy." In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ed. Seyla Benhabib, 95-119.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maroff, Jean, and John L. Comaroff. eds. 2001. *Millennial Capitalism and the Culture of Neoliberalism*.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Cornelius Castoriadis. 1983. "The greek polis and the creation of democracy." *Graduate Faculty Philosophy Journal* 9.
- Daniele Archibugi and David Held. 1995. *Cosmopolitan democracy : an agenda for a new world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 Daniele Archibugi. 2002. "Demos and cosmopolis." *New Left Review* 13: 24-38.
- Daniele Archibugi. 1998. "Principles of cosmopolitan democracy." In *Re-imagining political community*, ed. Daniele Archibugi and David Held and Martin Kohler, 198-228. Oxford: Polity Press
- David Held, 1998, "Democracy and Globalization." In *Re-imagining political community*, ed. Daniele Archibugi and David Held and Martin Kohler, 11-27. Oxford: Polity Press.
- David Held. 2003. "Cosmopolitanism: Globalization tamed?"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9: 465-480.
- Dryzek, John. 2002.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workin, Ronald. 2002. "The Threat to Patriotism." *The New York Times Review of Books*.
- Ecklund, Elaine Howard. 2008. *Korean American Evangelicals: New Models for Civic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 Habermas, Jürgen. 1998b. "On the Relation between the Nation,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In *The Inclusion of the Other: Studies in Political Theory*, ed. Ciaran Cronin and Pablo De Greiff, 129-53. Cambridge: MIT Press.
- _____. 1998c. "Does Europe Need a Constitution? Response to Dieter Grimm." In *The Inclusion of the Other: Studies in Political Theory*, ed. Ciaran Cronin and Pablo De Greiff, 155-61. Cambridge: MIT Press.
- _____. 1998d. "Struggles for Recognition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In *The Inclusion of the Other: Studies in Political Theory*, ed. Ciaran Cronin and Pablo De Greiff, 203-36. Cambridge : MIT Press.
- _____. 1998a. "The European Nation-State: On the Past and Future of Sovereignty and Citizenship." In *The Inclusion of the Other: Studies in Political Theory*, ed. Ciaran Cronin and Pablo De Greiff, 105-27. Cambridge: MIT Press.
- Haynes, Jeffrey. 2005. "Relig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fter '9/11'." *Democratization* 12: 3, 398-413.
- Hayward, Clarissa Rile. 2007. "Democracy's Identity Problem: Is "Constitutional Patriotism" the Answer?" *Constellations* 14,2: 182-96.
- Huntington, Samuel. 1993.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72,3: 22-49.
- Jameson, Fredereick, and M. Miyoshi, eds. *The Cultures of Globalization*.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John Keane. 2003. *Global civil societ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ymlicka, Will. 2001. "Citizenship in an Era of Globalization : Commentary on Held" *Politics in the Vernacular*, 317-26.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Kymlicka, Will.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Laborde, Cecile. 2002. "From Constitutional to Civic Patriotism",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 4: 591-612.
- Lawrence E. Harrison and Samuel P. Huntington eds. 2000.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Basic Books.
- Markell, Patchen. 2000, "Making Affect Safe for Democracy? On "Constitutional Patriotism" *Political Theory* 28,1: 38-63.
-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kar, Muthu. 2000. "Justice and Foreigners: Kant's Cosmopolitan Right" In *Cosmopolitans* 7, 1:23-45.
- Nancy Fraser and Axel Honneth.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 Nayan Chanda. 2007. *Bound Together: How Traders, Preachers, Adventurers, and Warriors Shaped Globaliz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Ohmae, Kenichi. 1995. *The End of the Nation State: The Rise of Regional Economies*. New York: Free Press.
- Pettit, Philip, 1997, *Republicanism :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 Oxford University.
- Pheng Cheah. 1998. "Given culture : rethinking cosmopolitan freedom in transnationalism." *Cosmopolis: thinking and feeling beyond the nation* ed. Pheng Cheah and Bruce Robbins, 290-328.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alim Rashid. 1997. *The clash of civilizations? : Asian response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Sofia Nsstr m. 2003. "What globalization overshadows." *Political Theory* 31,6: 808-834.
- _____. 2007. "The legitimacy of the people." *Political Theory* 35,5: 624-658.
- Steven Vertovec and Robin Cohen ed. 2002. *Conceiving cosmopolitanism : theory, context, practic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Charles. 1996. "Why Democracy Needs Patriotism" In *For Love of Country* ed. Joshua Cohen, 119-21. Boston : Beacon Press.
- _____, 1999, "Democratic Exclusion (and Its Remedies?)" In *Citizenship, Diversity, and Pluralism* ed. Alan Cairns, 265-87. Montreal :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_____, 2007. *A Secular A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Thomas Nagel. 2005. "The problem of global justic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3,2.
- Veit Bader, 1997, "The cultural conditions of transnational citizenship : on the interpretation of political and ethnic cultures." *Political Theory* 25,6: 771-813.
- Young Iris M.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Zygmunt Bauman. 1998. *Globalization : the human consequences*. Cambridge: Polity Press.



필자약력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성우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논문으로는 "플라톤의 〈메네크세노스〉와 아테네 제국의 정체성 그리고 플라톤의 정치적 삶" (〈한국정치학회보〉, 2007),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 미국헌법에서 원본주의(originalism)의 논쟁의 의미와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2006), "행복(Eudaimonia)의 정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에 나타난 철학적 삶과 정치적 삶의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2005)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 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김양규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ygkim@eai.or.kr

